

# 경제주평

## ■ 2023년 7대 국내 트렌드

- OUR HOPE of overcoming the unknown-unknown crisis  
[초미지(超未知)의 위기를 극복해 낼 것이라는 우리의 희망]

- ① Optimism and pessimism
- ② Unknown-unknown crisis
- ③ Revised supplementary budget and Pivot
- ④ Heterogeneous Business-Cycle
- ⑤ Overseas investment
- ⑥ Post-aged society
- ⑦ Elaborate access on Audacious Plan

# 목 차

## ■ 2023년 7대 국내 트렌드

### - OUR HOPE of overcoming the unknown-unknown crisis

[초미지(超未知)의 위기를 극복해 낼 것이라는 우리의 희망]

Executive Summary .....	i
1. 개 요 .....	1
2. 2023년 7대 국내 트렌드 .....	3
① Optimism and pessimism 상저하고의 가능성은? .....	3
② Unknown-unknown crisis 초미지(超未知)의 위기 .....	5
③ Revised supplementary budget and Pivot 추경과 피벗 .....	7
④ Heterogeneous Business-Cycle 업종별 경기의 이질성 .....	9
⑤ Overseas investment 투자의 시간과 공간 .....	11
⑥ Post-aged society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	13
⑦ Elaborate access on Audacious Plan 담대한 구상 실현을 위한 정교한 접근 ...	15

□ 비상업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 내용의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연구실 : (총괄) 주원 경제연구실장 (2072-6235, juwon@hri.co.kr)  
(남북경협) 이해정 통일경제센터장 (2072-6226, hjlee@hri.co.kr)

## Executive Summary

### □ 2023년 7대 국내 트렌드

- OUR HOPE of overcoming the unknown-unknown crisis

#### ■ 개 요

현대경제연구원은 2023년 7대 국내 경제 키워드로 『OUR HOPE (of overcoming the unknown-unknown crisis)』를 제시한다. 이는 2023년 대내외 경제 환경이 초미지(超未知, 未知의 未知, unknown-unknown)의 위기로 불릴 만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이를 극복하고 회복의 모멘텀을 만들어 안정적 성장 경로에 진입할 수 있다는 ‘우리의 희망(OUR HOPE)’을 의미한다. 한국 경제가 그동안 많은 위기 속에서도 저력과 끈기 그리고 역동성을 가지고 의연히 위기를 극복했던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최근 주변 환경이 비관적이지만 이번에도 ‘우리(단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는 모두, OUR)는 위기를 극복해 낼 것이다.’라는 믿음과 희망(HOPE)을 가져보자는 의미에서 2023년 국내 트렌드의 키워드로 선정하였다.

#### 2023년 7대 국내 경제 트렌드 - OUR HOPE of overcoming the unknown-unknown crisis

경기	Optimism and pessimism	상저하고의 가능성은?
성장	Unknown-unknown crisis	초미지(超未知)의 위기
정부정책	Revised supplementary budget and Pivot	추경과 피벗
산업	Heterogeneous Business-Cycle	업종별 경기의 이질성
기업	Overseas investment	투자의 시간과 공간
사회	Post-aged society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남북경협	Elaborate access on Audacious Plan	담대한 구상 실현을 위한 정교한 접근

#### ■ 2023년 7대 국내 트렌드

##### ① (경기) 상저하고의 가능성은? (Optimism and Pessimism)

(의미) 2023년 한국 경제는 불황 국면에 진입할 것이 예상되나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의 방향성에 따라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상저하고(U자형 추세) 또는 비관적인 장기 불황(L자형 추세)의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내용) 2023년 한국 경제의 경기 추세는 대부분 글로벌 요인들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 경제 침체 강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 중국의 리오프닝 정책의 향방 등이 그것이다. 또한, 국내 인플레이션 추세와 이에 따르는

기준금리 변화 등도 중요한 리스크 요인이 될 것이다.

2023년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의 방향성에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2023년 한국 경제의 경기 추세를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분명한 것은 **2023년에 들어서면서 경기 하강이 본격화되며 불황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다만, 이후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의 향방에 따라 'U'자형 또는 'L'자형의 경기 추세를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립적 시나리오(U자형)는 2023년 상반기 중 대내외 경기 하방 리스크가 크게 작용하면서 경제의 침체 국면이 이어지나, 하반기에 들어 경기 전환의 계기가 마련되면서 완만하게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는 경로를 의미한다.** 반면 **비관적 시나리오(L자형)는 2023년 하반기에도 경기 반등의 전환점을 마련하지 못하여 침체가 2024년까지 이어지는 경로를 가진다.**

(시사점) 대외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단계별 비상 계획 마련을 통한 글로벌 경제 위기 발생 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요구되며, 특히 불황의 어려움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등의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 ② (성장) 초미지(超未知)의 위기 (Unknown-unknown crisis)

(의미) 최근 대부분의 경제 예측 기관들이 2023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2%대에서 1%대로 하향조정하는 추세인바, 이러한 저성장이 단순히 경기 변동 상의 '단기적인 침체 국면'에서 나타나는 현상인지, 한국 경제의 '구조적 결함' 때문인지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초미지(위기의 원인과 본질에 대해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모르는: 未知의 未知, 超未知, unknown-unknown)의 위기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내용) 2022년 말 대부분의 경제 예측 기관들은 한국의 2023년 경제성장률을 2%대에서 1%대로 하향조정하였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잠재성장률이 2% 내외 수준임을 고려할 때, 1%대의 성장률이 전망되는 2023년은 명확하게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서는 것을 의미한다.** 1957년 이후 한국 경제성장률이 2%대를 기록한 경우는 흔히 있었으나, 2% 미만이었다던 사례는 1980년(△1.6%, 오일 쇼크), 1998년(△5.1%, 외환 위기), 2009년(0.8%, 금융 위기), 2020년(△0.7%, 코로나 위기)의 네 차례 뿐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수준의 경기 침체라 할 수 있다. 2023년 저성장 전망의 주된 원인은 전반적인 세계 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판단되며, 수출의존도와 對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이 고려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편, 일부에서는 **2023년 경제성장률이 1%대를 기록하는 것은 한국 경제가 'Secular stagnation(구조적 장기침체)'에 진입하는 신호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OECD가 2023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1.8%로 전망하면서 2024년에도 1.9%에 불과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고 판단된다.

(시사점) 단기적인 경기 침체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지만, 인력 확보, 투자 여건 개선, 연구개발투자 성과 제고 등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이 절실하다.

### ③ (정부정책) 추경과 피벗 (Revised supplementary budget and Pivot)

(의미) 시장에서는 정부가 2023년 경제 상황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물가 안정'과 '재정건전성 제고' 목표 수준을 완화하면서 통화정책의 피벗(Pivot, 금리인하)과 재정정책의 추경 편성 가능성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내용) 정부의 거시경제정책의 기초에서 **순응적인 통화정책과 경기역행적인 재정정책에 대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정책조합(政策調合, policy mix)인지, 물가 안정과 경기 활성화를 모두 달성하지 못하는 정책상충(相衝, trade off)인지에 대한 논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불황에 대응하는 경제정책은 완화적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통해 민간의 유동성 여력을 확대하는 경기역행적 기초를 통해 경기 침체의 폭과 지속 기간을 줄이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통화정책은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고금리를 지속하면서 경기순응적 기초를 유지 중인 반면, 재정정책은 적자 편성을 통한 경기역행적 기초를 가진다. 이에 통화 및 재정정책의 상반된 기초가 **정책 조합이 아닌 정책 상충의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하반기 이후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는 우선 통화정책에서는 단기간 내 인플레이션 목표치 달성이 쉽지 않기 때문에 상당 기간 고금리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하반기 들어 **피벗(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하반기 재정 여력의 고갈 속 재원 확보를 위한 **추경 편성의 논의가 시작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시사점) 단기적으로는 긴축적 통화정책의 부작용을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보완하는 정책조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향후 정책 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상존하기 때문에 국내 경제의 불황의 폭이 깊어지는 경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유연한 정책 기초의 전환이 요구된다.

### ④ (산업) 업종별 경기의 이질성 (Heterogeneous Business-Cycle)

(의미) 2023년 전반적인 거시 경제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업종별로 단기적 국내외 수요 부진 충격, 금융 시장 경색, 중장기 투자 수요 상존 등의 이질적인 상하방 리스크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업종 경기 사이클에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 내용) 수출 산업에서는 **기초소재 산업(철강, 유화)의 불황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나, **IT(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운송기계(자동차, 선박) 업종은 하반기 이후 경기 회복세가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내수 산업 중 소비 시장 지향형

업종은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소비 심리 악화와 복합불황(경기 침체와 자산 시장 약세)에 따른 소득 위축으로 어려움이 예상된다. 반면, **관광산업은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 등으로 외국인관광객 유입 확대가 예상되어 회복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판단되나, **연초 중국발 관광객에 대한 입국 제한조치로 상반기 중 회복 속도는 미약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 업종은 2023년 정부 SOC 예산 급감 및 부동산 경기 위축 등으로 실적 부진이 예상된다.

(시사점) 업종별 경기 상황에 맞는 산업 정책이 필요하며, 특히 대응 여력이 취약한 중소·중견 수출 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및 수출물류비 지원 확대, 삼중고(시공비 급증, 고금리에 따른 유동성 경색, 부동산 시장 수요 위축 등)에 직면한 건설업의 경기 연착륙을 도모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⑤ (기업) 투자의 시간과 공간 (Overseas investment)

(의미)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업 투자의 해외 비중이 높아지면서 성장잠재력 약화와 고용창출력 유출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의 자국 중심 공급망 구축 전략으로 향후 투자 공간의 해외 이전이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내용) 우리 기업 투자의 물리적 공간이 국내에서 해외로 빠르게 이전되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명목 기준 설비투자 규모는 2000년 81.0조원에서 2010년 127.0조 원 그리고 2021년 189.9조 원으로 연평균 4.1%씩 증가한 반면, 우리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2000년 6.1조 원(54.1억 달러)에서 2010년 29.7조 원(256.5억 달러) 그리고 2021년에는 87.9조 원(767.7억 달러)으로 연평균 13.5%씩 증가하고 있다. 국내설비투자과 해외투자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해외직접투자/국내설비투자 비중**을 추산해 보면 **2000년 그 비중이 7.6%**에 불과하였으나, 2021년 46.3% 그리고 **2022년 1~3분기 누계 기준 54.7%**로 크게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나아가 2023년 이후에도 상대적으로 불리한 국내 투자 여건과 시장지향적 글로벌 투자 트렌드의 영향으로 해외투자의 확대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해외직접투자에 한정해서 보면 지역별로는 주된 투자 대상 지역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급속하게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003년 우리 기업들의 對 중국 투자가 해외직접투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9.4%**에 달했던 적도 있었으나, 금융위기 이후 對 중국 투자가 정체되는 동시에 對 미국 투자 규모는 빠르게 확대되면서 **2022년(1~3분기 누계) 현재 對 중국 투자 비중은 10.0%, 對 미국 투자 비중은 35.9%**로 큰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對 중국 투자의 정체 및 미국 투자의 확대는 중국 내 생산 비용의 이점 소멸, 중국 시장의 경쟁 격화, 미국 정부의 파격적인 투자 유인책, 트럼프 행정부 이후의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전략 등의 영향 때문

이며, 이러한 추세는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시사점) 시장 규제 및 조세 제도의 정비,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등의 투자 여건 개선에 주력해야 할 것이며, 기존 성숙화된 산업에서 신규 투자가 발생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조속한 미래 성장 동력 발굴과 그에 대응되는 혁신적 산업 생태계 구축으로 민간 투자가 크게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 ⑥ (사회)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Post-aged society)

(의미) 한국 사회는 2025년 초고령사회(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로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양비 증가, 노인 복지 부담 등에 대한 사회 내 대응 전략 마련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주요 내용) 2023년 현재 한국의 고령층(65세 인구) 비중은 18.4%로 **2024년에는 고령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서고 2년 후인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전망된다.** 한국은 2000년에 고령화사회(ageing society,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7% 이상)로 진입하였으며, 이후 2018년에 고령사회(aged society,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로 진입하였다. 2023년 현재 고령층(65세 인구) 비중은 18.4%이며, 2024년에는 19.4% 그리고 2025년에는 20.6%를 기록하면서 초고령사회(post-aged society,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로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문제는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너무 빠르다는 점이며, 이에 따라 대응할 시간적 여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지금의 속도라면 **2044년에는 한국의 고령화율이 36.7%로 G7 국가 모두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 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성장잠재력 저하와 노년부양비 부담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 등으로 저성장 국면을 고착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73.4%로 이미 정점을 형성하고 낮아지는 추세이며, **생산가능인구 규모 자체도 2019년 3,762만 8,000명을 정점으로 하락하는 중이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향후 노동 투입 감소가 잠재성장률을 하락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된다. 한편,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고령층을 부양하기 위한 직간접적인 사회 비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노년부양비(old-age dependency ratio, 老年扶養比,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고령 인구비)는 2020년 21.8명에서 **2030년 38.6명 등으로 지속 증가하여 2067년에는 100.1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시사점) 노령층에 대한 중장기 사회 안전망 구축 로드맵이 시급하며, 사회 내 노인 문제의 심화를 완화하고 경제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생산적 노인 복지 시스템 구축 노력이 필요하다.

⑦ (남북경협) 담대한 구상 실현을 위한 정교한 접근 (Elaborate access on Audacious Plan)

(의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국면과 남북관계 현황을 고려할 때,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할 만큼 담대한 '초기 조치'를 마련하되, 정교하고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주요 내용)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악화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남북 간 상호 불신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 대응과 보건 위기 등 글로벌 환경 변화와 북핵 문제로 인한 대북제재 등 국제 정세와 국익 실현,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한편, 북한의 수용 가능성을 높이고,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의 초기 조치를 구체적으로 제안할 필요가 있다. 담대한 구상은 비핵화 협상 개시 단계부터 북한 민생 개선을 위한 초기 조치를 선제적으로 실천해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억지(Deterrence), 단념(Dissuasion), 대화·외교(Diplomacy)의 3D 요소들을 동시적으로 또는 순차적으로 진전시켜 담대한 구상을 실현해 나간다는 것이다.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복귀만 하면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 북한 민생개선 시범사업 등의 초기 조치를 실행할 계획이다.

(시사점) 정부의 담대한 구상과 북한의 수요,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한 '민생개선 시범사업'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가 개선될 경우, 정부의 그린데탕트 정책과 발맞춰 남북교류협력 추진이 가능한 협력 주체들의 접촉 기회 마련도 고민할 수 있다.

< 2023년 7대 국내 트렌드와 대응 방안 >

2023년 국내 트렌드	대응 방안
상저하고의 가능성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외 리스크 모니터링 강화 및 비상 계획 마련을 통해 글로벌 경제 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 필요</li> <li>불황 국면에서 어려움이 집중되는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li> </ul>
초미지의 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기적인 경기 침체 대응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 필요</li> <li>인력 확보, 투자 여건 개선, 연구개발투자 성과 제고 등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li> </ul>
추경과 피벗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반기 중 긴축적 통화정책의 부작용을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보완하는 정책조합 유지</li> <li>하반기 정책 상충을 방지하고 불황 극복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유연한 정책 기조로의 전환이 요구</li> </ul>
업종별 경기의 이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응 여력이 취약한 중소·중견 수출 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및 수출물류비 지원 확대</li> <li>삼중고(시공비 급증, 고금리, 시장 수요 위축 등)에 직면한 건설업 경기 연착륙 도모</li> </ul>
투자의 시간과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장 규제 및 조세 제도의 정비,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등의 투자 여건 개선에 주력</li> <li>미래 성장 동력 발굴 및 혁신적 산업 생태계 구축으로 민간 투자 활성화 계기 마련</li> </ul>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 사회의 빠른 고령화에 대응하여 노령층에 대한 중장기 사회 안전망 구축 로드맵이 시급</li> <li>노인 문제의 심화를 완화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생산적 노인 복지 시스템 필요</li> </ul>
담대한 구상 실현을 위한 정교한 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북한의 대내외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북한 비핵화를 견인할 수 있는 '민생개선 시범사업' 구체화</li> <li>정부의 그린데탕트 정책과 발맞춰 남북교류협력 추진이 가능한 협력 주체들의 접촉 기회 마련</li> </ul>



## 1. 개 요

○ 현대경제연구원은 2023년 7대 국내 트렌드로 『OUR HOPE of overcoming the unknown-unknown crisis』를 선정<sup>1)</sup>

- 현대경제연구원은 2023년 7대 국내 트렌드의 키워드로 '초미지(超未知)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자'라는 의미를 가진 『OUR HOPE』를 제시

- 2023년의 대내외 경제 환경은 초미지의 위기 Unknown-unknown crisis로 불릴 만큼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임
- 이를 극복하고 회복의 모멘텀을 만들어 안정적인 성장 경로에 재진입할 수 있다는 '우리의 희망 OUR HOPE'을 키워드로 선정함
- 한국 경제가 그동안 많은 경제 위기 속에서도 저력과 끈기 그리고 역동성을 가지고 의연히 위기를 극복했던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2023년 주변 환경이 우호적이지는 않지만 이번에도 '우리 모두는(단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는) 위기를 극복해 낼 것이다.'라는 믿음과 희망을 의미함

○ 2023년 7대 국내 트렌드

### ① (경기) 상저하고의 가능성은? - Optimism and pessimism

- 2023년 한국 경제는 불황 국면에 진입할 것이 예상되나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의 향방에 따라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상저하고 U자형 추세 또는 비관적인 장기 불황 L자형 추세의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

### ② (성장) 초미지(超未知)의 위기 - Unknown-unknown crisis

- 최근 대부분의 경제 예측 기관들이 2023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2%대에서 1%대로 하향조정하는 추세인바, 이러한 저성장이 단순히 경기 변동 상의 '단기적인 침체 국면'에서 나타나는 현상인지, 한국 경제의 '구조적 결함' 때문인지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초미지(超未知)의 위기 위기의 원인과 본질에 대해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모르는 : unknown-unknown crisis 상황에 직면

1) 현대경제연구원은 2022년 경제 트렌드의 키워드로 『AFTER TIMES(코로나 이후의 미래)』를 제시한 바 있음.

- ③ (정부정책) 추경과 피봇 - Revised supplementary budget and Pivot
  - 시장에서는 정부가 2023년 경제 상황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물가 안정’과 ‘재정건전성 제고’ 목표 수준을 완화하면서 통화정책의 피봇 Pivot, 금리인하과 재정정책의 추경 편성 가능성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
- ④ (산업) 업종별 경기의 이질성 - Heterogeneous Business-Cycle
  - 2023년 거시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업종별로 단기적 국내외 수요 부진, 금융 시장 경색, 중장기 투자 수요 상존 등의 이질적인 리스크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업종 경기 사이클에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판단
- ⑤ (기업) 투자의 시간과 공간 - Overseas investment
  -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업 투자의 해외 비중이 높아지면서 성장잠재력 약화와 고용창출력 유출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의 자국 중심 공급망 구축 전략으로 향후 투자 공간의 해외 이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 ⑥ (사회)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 Post-aged society
  - 한국 사회는 2025년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양비 증가, 노인 복지 부담 등에 대한 사회 내 대응 전략 마련의 필요성이 증대
- ⑦ (남북경협) 담대한 구상 실현을 위한 정교한 접근 - Elaborate access on Audacious Plan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국면과 남북관계 현황을 고려할 때,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할 만큼 담대한 ‘초기 조치’를 마련하되, 정교하고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

2023년 7대 국내 경제 트렌드 - OUR HOPE of overcoming the unknown-unknown crisis		
경기	Optimism and pessimism	상저하고의 가능성은?
성장	Unknown-unknown crisis	초미지(超未知)의 위기
정부정책	Revised supplementary budget and Pivot	추경과 피봇
산업	Heterogeneous Business-Cycle	업종별 경기의 이질성
기업	Overseas investment	투자의 시간과 공간
사회	Post-aged society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남북경협	Elaborate access on Audacious Plan	담대한 구상 실현을 위한 정교한 접근

## 2. 2023년 7대 국내 트렌드

### ① (경기) 상저하고의 가능성은? - Optimism and pessimism

#### ○ 의미

- 2023년 한국 경제는 불황 국면에 진입할 것이 예상되나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의 방향성에 따라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상저하고(U자형 추세) 또는 비관적인 장기 불황(L자형 추세)의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

#### ○ 주요 내용

- 2023년 경기 추세의 방향을 결정짓는 요인들은 세계 경제 침체 강도에 따른 수출 경기의 향방,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 인플레이션 추세와 이에 따르는 기준금리 변화 등이 있다고 판단
  - 2023년 세계 경제의 침체가 예상되고 있으나, 미국 내수 시장의 연착륙 가능성, 중국의 리오프닝에 따른 경제 활성화 여부 등 글로벌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요인들의 방향성은 아직 불확실함
    - ※ 현재까지 미국 내 소비 시장이 고금리 고물가에도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중국의 리오프닝 및 적극적 경기부양 정책으로 G2 미국과 중국 시장이 세계 경기 침체의 강도를 완화시킬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 초기보다 소강상태를 보임에 따라 휴전이나 종전의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으며, 만약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 경제 심리가 개선되면서 세계 경제의 침체 강도를 완화할 수도 있음
    - ※ 다만, 최근 휴전 협상의 움직임이 있으나 구체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러시아의 대규모 병력 재투입으로 전쟁이 격화되거나 장기화될 가능성도 충분한 상황임
  - 2023년에 들어서도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생각되나, 서비스 요금 인상과 임금 상승이 제한되면 하반기에는 안정된 수준의 인플레이션도 가능한 상황임
    - ※ 블룸버그의 전망에 따르면 한국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년동월대비은 2023년 1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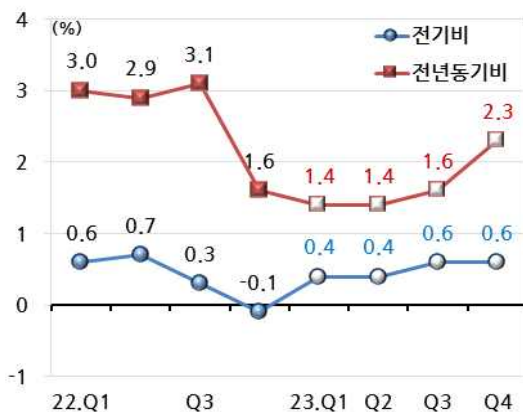
기 4.8%, 2분기 3.3%, 3분기 2.7%, 4분기 2.3%로 뚜렷한 하락세가 예상됨

-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의 방향성에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한국 경제의 경기 추세를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분명한 것은 2023년에 경기 하강이 본격화되어 불황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의 향방에 따라 'U'자형 또는 'L'자형의 경기 추세를 가질 것으로 전망
  - 중립적 시나리오 'U'자형 : 2023년 상반기 중 대내외 경기 하방 리스크가 크게 작용하면서 경제의 침체 국면이 이어지나, 하반기에 들어 경기 전환의 계기가 마련되면서 완만하게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는 경로임
  - 비관적 시나리오 'L'자형 : 2023년 하반기에도 경기 반등의 전환점을 마련하지 못하여 침체가 2024년까지 이어지는 경로임

○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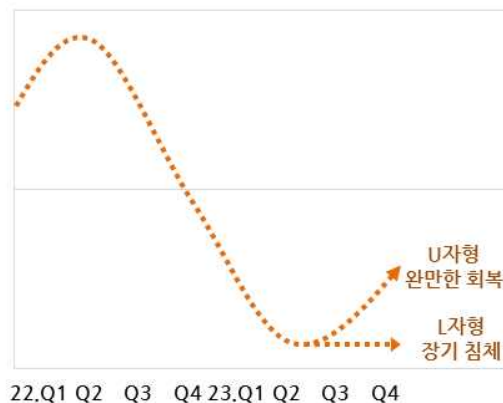
- 대외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단계별 비상 계획 마련을 통한 글로벌 경제 위기 발생 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요구되며, 불황 국면에서 어려움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등의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

< 블룸버그의 한국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 >



자료: Bloomberg.  
주: 국가별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현대경제연구원의 향후 경기 추세 전망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 ② (성장) 초미지(超未知)의 위기 - Unknown-unknown<sup>2)</sup> crisis

### ○ 의미

- 최근 대부분의 경제 예측 기관들이 2023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2%대에서 1%대로 하향조정하는 추세인바, 이러한 저성장이 단순히 경기 변동 상의 '단기적인 침체 국면'에서 나타나는 현상인지, 한국 경제의 '구조적 결함' 때문인지 알 수 없는 '초미지(超未知, 未知의 未知, unknown-unknown, 위기의 원인과 본질에 대해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모르는)의 위기 상황에 직면

### ○ 주요 내용

- 2022년 말 대부분의 경제 예측 기관들은 한국의 2023년 경제성장률을 2%대에서 1%대로 하향조정
  - 단기적으로는 현 잠재성장률이 2% 내외 수준임을 고려할 때, 1%대의 성장률이 전망되는 2023년은 명확하게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서는 것을 의미함
  - 한편, 1957년 이후 경제성장률 2% 미만 사례는 1980년  $\Delta 1.6\%$ , 오일 쇼크, 1998년  $\Delta 5.1\%$ , 외환 위기, 2009년  $0.8\%$ , 금융 위기, 2020년  $\Delta 0.7\%$ , 코로나 위기의 네 차례뿐임
- 2023년 저성장 전망의 주된 원인은 세계 경제의 전반적인 침체의 영향으로 판단되며, 특히 주요 해외연구기관의 경우 수출의존도와 對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고려하였기 때문으로 판단
  - 국내에서는 KDI 1.8%, 한국은행 1.7%, 기재부 1.6% 등이 1%대 후반을 전망하는 반면, 해외기관들은 OECD 1.8%를 제외하고 ADB 1.5%, IB 1.1%, 2022년 12월 기준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전망치를 제시함

2) 문헌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용어의 최초의 사용 시기는 1970년 미 상원 청문회(United States Congress. Senate. Committee on the Judiciary. Subcommittee on Antitrust and Monopoly, Competition in Defense Procurement-1969: Hearing, Ninety-first Congress)임. 또한 1981년 미 하원 청문회(NASA Program Management and Procurement Procedures and Practices: Hearings Before the Subcommittee on Space Science and Applications of the Committee on Science and Technology, U.S. House of Representatives, Ninety-seventh Congress, First Session)에서도 언급된 바 있음. 이후 2002년 럼스펠드(Donald Rumsfeld) 미 국방장관의 기자회견에서도 사용되며 널리 알려짐.

- 그러나, 일부에서는 2023년 경제성장률이 1%대를 기록하는 것은 한국 경제가 ‘Secular stagnation(구조적 장기침체)<sup>3)</sup>에 진입하는 신호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
  - OECD의 경우 2023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1.8%로 전망하면서 2024년에도 1.9%에 불과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함
  - 이는 성장잠재력의 하락을 의미하는 ‘secular stagnation 장기침체 또는 저성장 장기화’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노동력의 핵심인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이미 2012년을 정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했으며, 인구 규모 자체도 2019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주된 근거로 판단됨<sup>4)</sup>
  - 또한, 최근 국내 자본 및 연구개발 투자의 부진으로 자본축적과 기술혁신이 정체되는 점도 잠재성장률 하락 가속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시사점

- 단기적인 침체 대응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지만, 인력 확보, 투자 여건 개선, 연구개발투자 성과 제고 등을 통해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이 절실

< 1957년 이후 한국 경제성장률 2% 미만 사례 >

연도	경제성장률	원인
1980	-1.6%	오일쇼크
1998	-5.1%	외환 위기
2009	0.8%	금융 위기
2020	-0.7%	코로나 위기

자료: 한국은행, 현대경제연구원.

< OECD 국가별 기간별 잠재성장률(CAGR) 전망 >

국가	2010~20	2020~30	2030~40
한국	3.1%	1.9%	0.7%
일본	0.6%	0.6%	0.5%
미국	1.8%	1.8%	1.5%
OECD	1.7%	1.6%	1.4%

자료: OECD(October 2021), 현대경제연구원.  
주: baseline projections.

3) 현대경제연구원은 1년 전인 2022년 1월, “2022년 10대 경제 키워드 - AFTER TIMES(코로나 이후의 미래)”에서 이를 언급한 바 있음.

4) 통계청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73.4%로 이미 정점을 형성하고 낮아져 2022년에는 71.0%에 이르고 2030년에는 66.0%까지 하락할 것으로 추정됨. 생산가능인구 규모 자체도 2019년 3,762만 8,000명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이후 2022년 3,700만 명대가 붕괴(3,667만 5,000명)되고, 2030년에는 3,381만 3,000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됨.

### ③ (정부정책) 추경과 피벗 - Revised supplementary budget and Pivot

#### ○ 의미

- 시장에서는 정부가 2023년 경제 상황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물가 안정'과 '재정건전성 제고' 목표 수준을 완화하면서 통화정책의 피벗(Pivot, 금리 인하)과 재정정책의 추경 편성 가능성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

#### ○ 주요 내용

- 경기순응적인 통화정책과 경기역행적인 재정정책에 대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정책 조합(政策調合, policy mix)인지, 물가도 성장도 모두 안 되는 정책 상충(相衝, trade off)인지에 대한 논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 통상 불황에 대응하는 경제정책은 완화적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통해 민간의 유동성 여력을 확대하는 경기역행적 기조를 형성하여 경기 침체의 폭과 지속 기간을 줄이는 것임
  - 그러나 현재 통화정책은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고금리를 지속하면서 경기순응적 기조를 유지 중인 반면, 재정정책은 적자 편성을 통한 경기역행적 기조를 가짐
  -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상반된 기조가 정책 조합이 아닌 정책 상충의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존재함
- 단기간 내 인플레이션 목표치 달성이 쉽지 않기 때문에 상당 기간 고금리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하반기 들어 피벗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안정세가 지속되면서 상품 부문의 인플레이션 압력은 크게 약화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하반기에 들어서도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경우 시장에서는 피벗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높게 볼 것으로 판단됨
  - 단, 공공요금 인상, 임금 상승 등의 서비스 부문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될 경우 금리 인하 시점이 상당 기간 지연될 가능성도 상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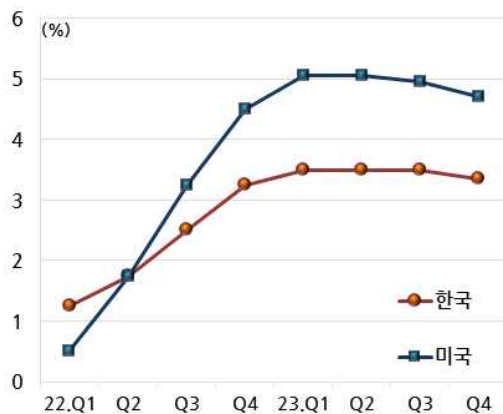
- 하반기 재정 여력의 고갈 속 재원 확보를 위한 추경 편성의 논의가 확산될 것으로 판단

- 기획재정부 이하 기재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2023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1.6%로 예측한 바 있는데, 이는 국제기관인 OECD 1.8%는 물론, 국책 기관인 KDI 1.8%와 한국은행 1.7%의 전망치보다 낮은 수준임
- 기재부의 예상치는 정부의 경제 운영 목표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통상 다른 기관 대비 높은 수준이었다는 경험상에서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됨
- 또한, 최근 기재부는 2023년 상반기 재정집행률을 역대 최고 수준인 65%까지 끌어올릴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하였기에, 2023년 하반기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 규모는 35% 수준에 불과함
- 따라서 2023년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하반기 재정 여력이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보강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인 추경 편성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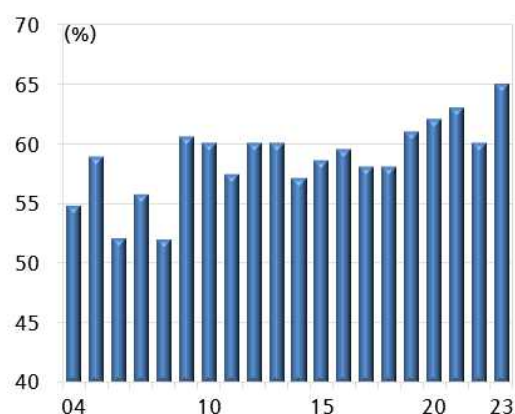
- 단기적으로는 긴축적 통화정책의 부작용을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보완하는 정책조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향후 정책 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불황의 폭이 깊어지는 경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유연한 정책 기조의 전환이 요구

< 미·한 정책금리 추이 및 전망 >



자료: Bloomberg.  
주: 국가별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상반기 재정조기집행률 목표 추이 >



자료: 기획예산처 「재정집행특별점검단 회의」 및 기획재정부 「재정관리점검 회의」 보도자료.



④ (산업) 업종별 경기의 이질성 - Heterogeneous Business-Cycle<sup>5)</sup>

## ○ 의미

- 2023년 전반적인 거시 경제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업종별로 단기적 국내외 수요 부진, 금융 시장 경색, 중장기 투자 수요 상존 등의 이질적인 상하방 리스크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업종 경기 사이클에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판단

## ○ 주요 내용

- 수출 산업에서 기초소재 산업의 불황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나, IT 업종, 운송기계 업종은 하반기 이후 경기 회복세가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
  - 철강, 유화 등 기초 소재 산업은 세계 시장의 침체와 산업 내 공급과잉 문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여 2023년 연중으로 침체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IT 업종의 경우에도 2023년 전반적인 시장 수요 위축이 예상되나, 하반기에 들어 시장 수요가 소폭 회복되면서 경기 반등의 모멘텀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됨
  - 자동차 산업은 차량용 반도체 공급 개선, 친환경차 수요 확대 등으로 호황이 예상되며, 조선업도 기존 수주 물량이 건조로 이어지면서 비교적 업황이 양호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 2022년 11월, 전체 수출이 14.0% 감소하였으나, 자동차 수출은 31.0%가 증가하였으며, 전기차 수출도 25.3% 증가함
    - ※ 클락슨리서치 **Clarksons Research**에 따르면, 2022년 한국 조선업의 수주 물량은 2021년 대비 11% 감소한 1,564만CGT를 수주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2022년까지의 수주 잔량 규모는 향후 약 2~3년 치 건조 물량에 해당됨
- 내수 산업은 소비 시장 지향형 업종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반면, 관광 산업은 회복 국면으로의 진입이 예상
  -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소비 심리 악화와 복합불황 경기 침체와 자산 시장 약세

5) 본 절의 키워드는 다음의 논문에서 차용함 - Evert, Jackson and Schwartzman, Felipe F.(2016), "The Heterogeneous Business-Cycle Behavior of Industrial Production", Economic Quarterly, Issue 3Q, pp. 227-260.

에 따른 소득 위축으로 전반적인 소비자 구매력이 감소하면서, 소비 시장 비중이 높은 업종의 부진이 예상됨

※ 음식료, 의류·신발 등의 비·준 내구재 업종의 경기 부진이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가전, 가구 등의 내구재 산업이 상당한 불황을 겪을 것으로 판단됨

· 건설 업종은 2023년 정부 SOC 예산 급감 및 부동산 경기 위축 등으로 실질적 부진이 예상됨

※ 2023년 SOC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25.0조 원으로 2022년 28.0조 원 대비 10.7% 감소하였으며, 건축 부문에서 전국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10월의 약 4만 7,000가구에서 11월에 5만 8,000가구로 급증하며, 2019년 9월 6만 62가구 이후 3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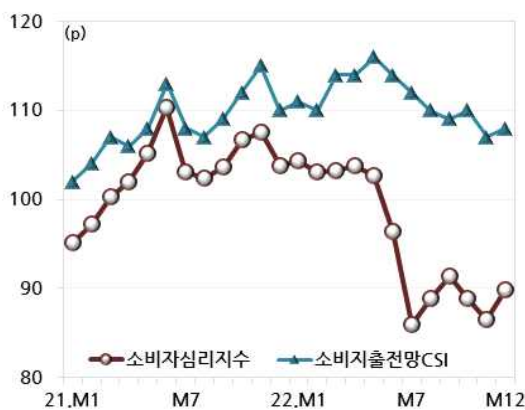
· 관광산업은 워드 코로나로의 전환 등으로 외국인관광객 유입 확대가 예상되어 회복 기초를 이어갈 것으로 판단되나, 연초 중국발 관광객에 대한 입국 제한조치로 상반기 중 회복 속도는 미약할 것으로 전망됨

※ 2022년 10월 중 입국한 외국인관광객수는 36.1만 명으로 2019년 월평균 120만 명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임

○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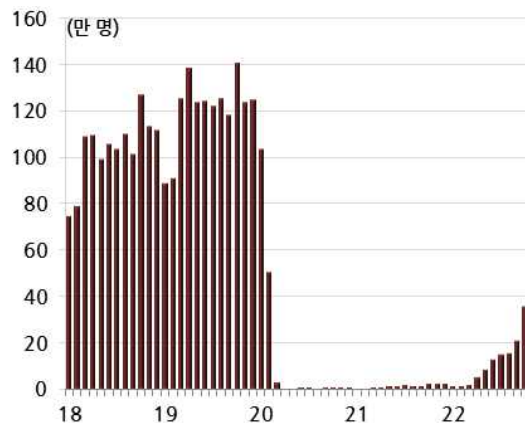
- 업종별 경기 상황에 맞는 산업 정책이 필요하며, 특히 대응 여력이 취약한 중소·중견 수출 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및 수출물류비 지원 확대, 삼중고(시공비 급증, 고금리에 따른 유동성 경색, 부동산 시장 수요 위축 등)에 직면한 건설업의 경기 연착륙을 도모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

< 소비자심리지수 및 소비지출전망CSI >



자료: 한국은행.  
주: 소비지출전망은 현재 대비 6개월 후 전망.

< 월별 외국인 관광객수 추이 >



자료: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주: 방한 외국인 중 관광 목적.

## ⑤ (기업) 투자의 시간과 공간 - Overseas investment

### ○ 의미

-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업 투자의 해외 비중이 높아지면서 성장잠재력 약화와 고용창출력 유출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의 자국 중심 공급망 구축 전략으로 향후 투자 공간의 해외 이전이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

### ○ 주요 내용

- 기업 투자의 물리적 공간이 국내에서 해외로 빠르게 이전되는 추세가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
  - 국내 명목 기준 설비투자 규모는 2000년 81.0조 원에서 2010년 127.0조 원 그리고 2021년 189.9조 원으로 연평균 4.1%씩 증가함
  - 한편, 우리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2000년 6.1조 원 54.1억 달러에서 2010년 29.7조 원 256.5억 달러 그리고 2021년에는 87.9조 원 767.7억 달러으로 연평균 13.5%씩 증가함
  - 통계상 분류 불일치로 국내설비투자자와 해외투자자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으나, 해외직접투자/국내설비투자 비중을 추산해 보면 2000년 그 비중이 7.6%에 불과하였으나, 2021년 46.3% 그리고 2022년 1~3분기 누계 기준 54.7%로 크게 높아짐<sup>6)</sup>
  - 해외 투자의 확대 추세는 조세, 시장 규제 등 상대적으로 불리한 국내 투자 여건, 시장지향적 글로벌 투자 트렌드 등에 그 원인이 있음
- 해외직접투자에 한정해서 보면 지역별로는 최대 투자 대상 지역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전환
  - 對 중국 투자 규모는 2000년만 해도 8.0억 달러로 對 미국 투자 규모인 15.1억 달러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음
  - 그러나 중국이 개방되고 빠른 공업화 전략을 추구하면서 '세계의 공장'으로

6) 해외직접투자에는 건설투자 중 플랜트와 같은 SOC 투자도 포함되기 때문에 해외직접투자자와 국내설비투자 규모의 단순한 비교가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국내투자자와 해외투자의 추세를 파악하는 데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한편 해외투자 규모는 당해연도의 평균 환율로 환산하여 계산함.

발돋움하면서, 2002년 우리 기업들의 對 중국 투자가 11.6억 달러로 對 미국 투자 6.5억 달러를 넘어섬

- 우리 기업들의 전체 해외투자 중 對 중국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최대 39.4%에 달했던 적도 있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중국은 우리의 최대 투자 대상국 지위를 유지함
- 그러나 금융위기 직후인 2011년 이후 對 중국 투자 규모는 정체되는 동시에 對 미국 투자 규모는 빠르게 확대되면서 2022년 1~3분기 누계 기준 우리 해외직접투자 중에서 對 중국 투자 비중은 10.0%, 對 미국 투자 비중은 35.9%를 기록함
- 對 중국 투자의 정체 및 미국 투자의 확대는 중국 내 생산 비용의 이점 소멸, 중국 시장의 경쟁 격화, 미국 정부의 파격적인 투자 유인책, 트럼프 행정부 이후의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전략 등의 영향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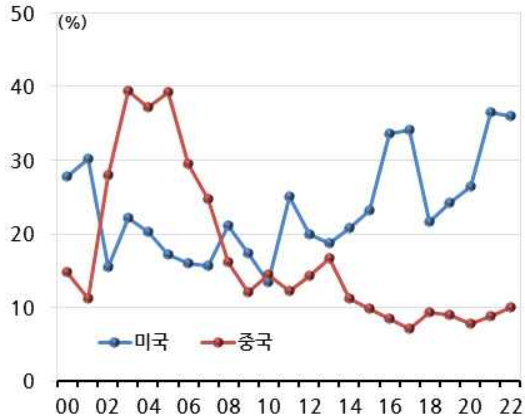
○ 시사점

- 시장 규제 및 조세 제도의 정비,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의 투자 여건 개선에 주력해야 할 것이며, 기존 성숙 산업에서 신규 투자가 발생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조속한 미래 성장 동력 발굴과 그에 대응되는 혁신적 산업 생태계 구축으로 민간 투자 활성화를 도모

< 국내설비투자 및 해외직접투자(투자금액) 추이 >



< 對 미국 및 중국 해외직접투자(투자금액) 비중 추이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및 한국은행 통계를 이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통계를 이용한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이용한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주: 2022년은 1~3분기 기준. 주: 2022년은 1~3분기 기준.

⑥ (사회)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 Post-aged society

○ 의미

- 한국 사회는 2024년 초고령사회(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로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양비 증가, 노인 복지 부담 등에 대한 사회 내 대응 전략 마련의 필요성이 증가

○ 주요 내용

- 2023년 현재 한국의 고령층(65세 인구) 비중은 18.4%로 2024년에는 고령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서고 2년 후인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전망
  - 한국은 2000년에 고령화사회 ageing society,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7% 이상로 진입하였으며, 이후 2018년에 고령사회 aged society,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14% 이상로 진입함
  - 통계청 전망에 따르면 2023년 현재 고령층 65세 인구 비중은 18.4%임
  - 나아가 2024년에는 19.4% 그리고 2025년에는 20.6%를 기록하면서 초고령 사회 post-aged society,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20% 이상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
  - 문제점은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너무 빠르다는 점이며, 이에 따라 한국 사회가 고령화에 대응할 시간적 여력이 크게 부족하다는 것임

< 한국 및 G7 국가의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 소요 기간 >

구 분	한국	캐나다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영국	일본
고령사회 진입연도	2018	2010	2014	1990	1983	1988	1975	1994
초고령사회 진입연도	2025	2024	2029	2018	2008	2006	2025	2004
소요 기간	7년	14년	15년	28년	25년	18년	50년	10년

자료: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및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1.12)」를 이용한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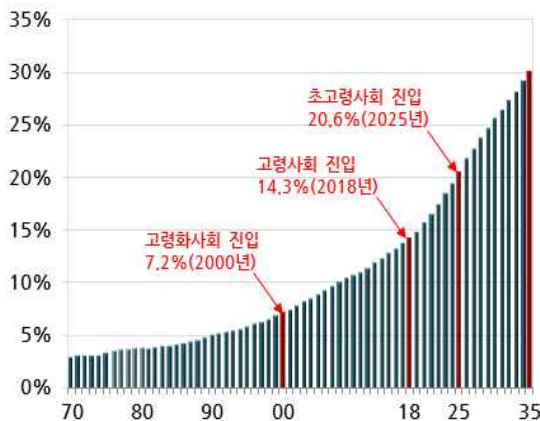
7) 2044년에는 한국의 고령화율이 36.7%로 G7 국가 모두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

- 인구 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성장잠재력 저하와 노년부양비 부담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 등으로 저성장 국면을 고착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
  - 통계청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 15~64세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73.4%로 이미 정점을 형성하고 낮아지는 추세이며, 생산가능인구 규모 자체도 2019년 3,762만 8,000명을 정점으로 하락하는 중임
  -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향후 노동 투입 감소가 잠재성장률 하락을 주도할 것으로 예측됨
    - ※ 현대경제연구원 2019은 2016~20년 이후 노동의 성장률에 대한 성장 기여도는 마이너스로 전환되었으며, 2026~30년에는 잠재성장률이 연평균 1.9%인 가운데 노동의 기여도가 △0.6%p에 달할 것으로 추정함
  - 한편,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고령층을 부양하기 위한 직간접적인 사회 비용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 ※ 우리나라의 노년부양비 old-age dependency ratio, 老年扶養比,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비는 2020년 21.8명에서 2030년 38.6명 등으로 지속 증가하여 2067년에는 100.1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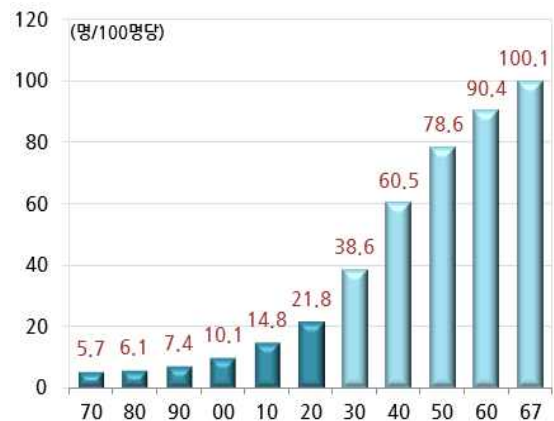
- 노령층에 대한 중장기 사회 안전망 구축 로드맵이 시급하며, 사회 내 노인 문제의 심화 정도를 완화하고 경제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생산적 노인 복지 시스템 구축 노력이 필요

< 고령화율(65세이상인구/총인구) 추이 및 전망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주: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1.12)」를 이용한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 노년부양비(65세이상인구/생산가능인구) 추이 및 전망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주: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1.12)」를 이용한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 ⑦ (남북경협) 담대한 구상 실현을 위한 정교한 접근 - Elaborate access on Audacious Plan

### ○ 의미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국면과 남북관계 현황을 고려할 때, 북한의 비핵화를 전인할 만큼 담대한 '초기 조치'를 마련하되, 정교하고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

### ○ 주요 내용

-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악화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남북 간 상호 불신을 해소할 필요
  - 기후변화 대응, 보건 위기 등 글로벌 환경 변화와 북핵 문제로 인한 대북제재 등 국제 정세, 국익 실현,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북한의 수용 가능성을 높이고,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의 초기 조치를 구체적으로 제안할 필요가 있음
- 담대한 구상은 비핵화 협상 개시 단계부터 북한 민생 개선을 위한 초기 조치를 선제적으로 실천해 북한의 비핵화를 전인한다는 계획
  - 담대한 구상은 억지 Deterrence, 단념 Dissuasion, 대화·외교 Diplomacy의 3D 요소들을 동시적으로 또는 순차적으로 진전시켜 나간다는 입장임
  -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복귀만 하면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 북한 민생개선 시범사업 등의 초기 조치를 실행할 계획임
- 북한의 인민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대한 고민과 수요를 고려하여 정부의 담대한 구상 초기 조치인 '민생개선 시범 사업'을 구체화할 필요
  - 현재의 대북제재 국면과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내보일 만큼 담대한 남북교류협력 방안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함
  - 특히, 초기 조치로 제안하는 사업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북한의 수요를 고려하여 북한의 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담대한 구상의 주요 내용 >

**초기조치 + 포괄적 합의**  
비핵화 협상 개시 단계부터 북한 민생 개선을 위한 초기조치를 선제적으로 실천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Resources-Food Exchange Program, R-FEP)**  
제재 대상인 북한 광물자원의 수출을 일정 한도 내에서 허용하고, 동대금을 활용해 식량·비료·의약품 등 인도적 물품을 구입토록 하는 매커니즘

 **북한 민생개선 시범사업**  
보건·의료, 식수·위생, 산림, 농업 등 민생협력사업 시범 추진 후 비핵화 단계에 맞춰 사업 확대

**실질적 비핵화**  
남북 간 비핵화 로드맵 마련 시, 경제·정치·군사 분야의 포괄적 조치를 동시적·단계적 추진

< 3대 분야 >

- 1 인프라 구축
- 2 민생 개선
- 3 경제 발전

< 거버넌스 >

《남북공동경제발전위원회》

< 5대 사업 >

-  **발전·송배전 인프라 지원**  
북한 노후 발전소부터 시범 개보수 후, 여타 발전소 및 송배전 설비를 단계적으로 현대화
-  **항만·공항 현대화 프로젝트**  
북한 거점 항만·공항부터 시범 개보수 후, 단계적으로 현대화 확대
-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초기조치로 농업 기술 지원 우선 추진, 이후 거점별 농업 인프라 구축 지원
-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도(道) 단위 병원 현대화 시범 실시, 이후 단계적으로 병원 및 보건의료 인프라 확대
-  **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 아래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및 해외 투자유치 적극 지원

**완전한 비핵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 시, 평화협정 체결 등 실질적 평화정착 추진

- [공동번영]**
- 남북 경제협력 본격화
    - 전면적 투자 및 교역 확대
  -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 본격 이행

- [미북관계 정상화]**
- [평화 정착]**
- 평화협정 체결 등 실질적 평화체제 구축
- [군사적 신뢰 증진]**
- 군비통제 본격화

자료: 통일부 설명자료(2022.11.21.)

○ 시사점

- 정부의 담대한 구상과 북한의 수요,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한 '민생개선 시범사업'을 구체화할



**필요**

- 담대한 구상의 초기 조치로 제안된 ‘북한 민생개선 시범사업’ 추진 지역으로 북한 원산지역을 우선 검토가 가능함
  
- 남북관계가 개선될 경우, 정부의 그린데탕트 정책과 발맞춰 남북교류협력 추진이 가능한 협력 주체들의 접촉 기회 마련도 고민할 필요
  - 남한의 주요 접경지역 지자체들의 교류협력 추진 계획과 북한의 지방경제발전 정책, 남북간 기존 협력 경험을 고려하여 각 지역의 특성과 자연환경, 주요 인적 자원 등을 고려한 효과적 협력 과제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남북간 교류협력 경험을 보유한 남측의 경기도와 북측의 개성, 남측 강원도와 북측 강원도 간 단계적 협력 과제를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임
    - ※ 윤석열 정부의 남북 그린데탕트 정책은 미세먼지·자연재난 공동대응 등 환경 협력을 추진하고, 산림·농업·수자원 분야 협력 강화와 접경지역의 그린평화지 대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함 **HRI**

주 원 경제연구실장(이사대우) (2072-6235, juwon@hri.co.kr)

이해정 통일경제센터장 (2072-6226, hjlee@hri.co.kr)